"인기정책이 제도 잠식할 때 시장은 한발 먼저 경고 보낸다"

- 전광우(경제69학번)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바라본 한국경제

전광우(경제27회)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3월 『전광우의 글로벌 뷰』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서문에서 그는 "우리는 지금 세계의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냉전 이후 확산되던 자유무역과 글로벌협력의 질서는 흔들리고, 지정학은 다시 경제를 압도하며, 정치의 선택은 곧바로 시장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수차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바로잡아왔다. 관건은 위기를 인식하는 용기와,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책임을 택하는 리더십이다. 이 책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발표한 수백 편의 칼럼, 기고문, 인터뷰 기사 중 70여 편이 선별,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산업, 금융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내고 키워갈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했다. 필자는 그중에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쓰여진 글을 일부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 자료를 덧붙여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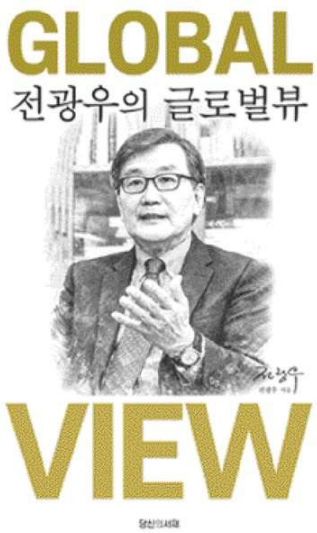
민생회복지원과 국가부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정부는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총 13.9조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 중 1차는 전국민 1인당 15만원과 취약 계층 1인당 3~40만원,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원씩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였다.

저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증권시장이 큰 활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난 20~30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댄 결과 국가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나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자산 부국이라서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확대는 피해야 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예산팽창과 국가부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총 727.9조원 규모의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의 예산은 매년 4~5% 정도 증가해 오다가 2019~22년 코로나19 사태 때 8~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후 2~5%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26년 예산을 다시 8%대로 늘리면서, 팽창된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마중물은 절제 있게 써야 한다. 마중물을 너무 많이 붓거나 너무 적게 부으면 펌프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경기활성화에 모멘텀을 주기위한 꼭 필요한 정도를 써야지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은 국가부채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결과이다. 지금 일본에 남은 것은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의 부채 구조이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나 기업 PF 부실도 국가부채화 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부채는 늘리기는 쉬우나 줄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필요하다면 PF 부실 같은 건 빨리 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 내년에는 규제 · 금융 · 공공 · 연금 · 교육 · 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와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노동개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노동의 양과 질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52시간제 규제 완화 등 유연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비생산적 노조문화도 바꿔 나가야 한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노동개혁이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노동자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 독일 진보당 당수였던 슈뢰더 총리는 진보이면서도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동시에 이뤄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평소 노동계와 대화가 많은 정부에서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중에 제일 뒤인 노동을 맨 앞으로 앞당겨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에 부담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 행위가 무얼 의미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전조정 절차를 강화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기업이 제대로 뛰어 기업가치가 높아져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동자들도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가경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18년 만의 일이다. 법 개정의 요지는 작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13%까지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은 출범 초기 70%에서 점차 인하, 41.5%까지 내려온 것을 올해부터 43%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모수(模數)개혁이란 연금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연금운영과 관련된 수치, 즉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저자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 올해부터 실시된 것을 환영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와 규칙기반 개혁을 채택해 왔다. 스웨덴은 연금재정 악화 시 급여가 자동 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 역시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캐나다 연금(CPP)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장기투자에 성공했다"고 외국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과거 3%대를 웃돌던 것이 2016년에는 2.93%를 기록하면서 3%선이 무너졌고,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이후에는 2% 중반, 2026년에 1.66%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1.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 2%대를 회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대인 미국보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허약해진 것이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합당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회복도 중요한 과제이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실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송전선 같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기업 활성화를 꾀하고, 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이 마이너스성장에 빠진 것은 코로나19팬데믹에도 무리하게 재정준칙만 고수한 결과이다."

AI 기술개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고령자는 나이와 함께 시각, 청각, 인지,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는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다.

저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인력 감소는 로봇을 포함한 AI 개발에 따른 생산력 제고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AI 혁명의 노동생산성 제고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국내 AI 산업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AI 혁신효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시기다. 제4혁명으로 일컬어지는 AI가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투자자본이 수익을 창출하여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산업 대변혁이 일어날 때 금융투자는 더 적극적인 risk-taking을 감당해야 한다.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그 동안 우리나라는 2007년 체결된 한미FTA협정에 따라 대미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25%(다른 나라에도 20~50%)의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한미 당국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같은 해 7월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그중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이내로 분할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및 관련 금융협력 방식으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 관세율을 우리나라와 같이 15%로 인하하면서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저자는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15% 낮추면서 투자액도 매년 200억 달러로 제한하여 선방(善防)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규제 문제나, 승인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다 챙겨주니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것을 1, 2년내에 모두 선점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곳들만 남을 수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마인드셋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더 발전해 나가고, 국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 같은 협상은 지난 2월 미연방 대법원의 위법판결로 무효화되고, 미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추가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매우 유동적이다. 다만 우리는 대미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저자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필로그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글들이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한국의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다"며 "나는 오랜 시간 해외에서 일하며, 국제기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직접 접했다. 밖에서 본 한국은 언제나 특별했다. 빠른 학습능력,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위기 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 자산이 당연시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아왔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단기 인기정책이 제도를 잠식할 때 시장은 늘 한발 먼저 경고를 보낸다. 나는 그 경고를 기록해 왔을 뿐"이라고 썼다.

한편 저자는 1973년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며 인디애나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교수를 거쳐 15년간 세계은행 금융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1998년에 귀국,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특보(1998~2001)로서 위기 극복에 힘을 더했다. 2008년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9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2013년까지 최장수 재임기록을 남겼다. 2019년 1월에는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상학58학번)이 설립, 운영해오던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글 사진: 윤제철(경영66학번)
공인회계사, 전 상대총동창회사무국장〉